

‘여자 기술원’을 둘러싼 논쟁

서울시립여자기술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와중에 서울시 의회 의원들이 기술원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계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모 여성지가 여자기술원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사화한 뒤 최근 모 방송사가 이를 다시 문제삼자 일부 의원들이 그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며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위탁 경영하고 있는 기술원은 윤락여성들을 위한 시설로 직업 훈련과 의식 강화교육을 통해 재윤락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경찰 단속에 걸린 윤락여성들이 재판도 거치지 않고 강제로 수용되고 있는데다 교육받는 동안 심한 구타에 시달리는 등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노출시켜 왔다.

여기에 재윤락 방지라는 기술원의 기본 목적이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일단 기술원에 수용되면 양재와 미용, 기계자수 등 재활을 위한 일련의 직업훈련 교육을 받게 된다. 문제는 이 교육이 과연 실효를 거두고 있느냐는 것이다.

양재나 미용, 기계 자수 등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이 기술원을 퇴소한 여성들의 공통된 견해다.

여기에 ‘너무 지당한 말씀’으로 일관된 의식 교육이 일반인들과는 ‘동떨어진’ 윤락여성들에게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반 문제점이 도마위에 오르자 의원들은 한결같이 “골치아프다”며 “자꾸 말썽이 생기니 이 기회에 폐쇄하는 것이 어떻나”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다는 것.

기술원을 폐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서울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기술원은 자동적으로 문을 닫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지 무조건 없애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라며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서울시 의회에 강한 불만을 표하고 있다.

윤락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 연령이 하향되고 있는 때에 유일하게 있는 교육기관마저 없어진다면 윤락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관계당국도 기술원이 문제가 되자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개정을 통해 인권침해 소지를 제거하겠다는 오랜만에 반가운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제도나 기구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거친 연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술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애초 기술원을 창립했던 취지를 되새겨볼 때